미래산단 방치·소극적 쌀 대책 질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전남도립대-목포대 통합 지지부진 지적

전남도의회는 19일 제 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는 전남도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대책, 쌀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 계획, 전남도립대 활성화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나주 미래산단, 이대로 방치할텐가=김옥기(민주·나주2) 의원은 "나주시가 지난 2007년 10월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말까지 특성화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던 미래일반산업단지(295만4000㎡)의 경우 시행사인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사는커녕 보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장산·양산리 일대에 조성키로 한 미래일반산단은 시행사의 포기로 방치된 이후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전남개발공사에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개발공사가 산단 개발을 위한 SPC 설립에 참여를 거부했고 민간 건설사의 투자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산단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남도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남도립대, 목포대 통합 물 건너 갔나=박철홍(민주·담양1) 의원은 "현재 도립대가 전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 의문"이라며 "도립대 활성화를 위해 논의됐던 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도립대와 목포대 통합 문제의 경우 목포대가 지난 4월 말 도립대를 목포대로 통합하는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간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대학간 통폐합은 국립대학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포대·도립대 통합건은 통합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0일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찾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쌀 대북지원 언제 할텐가=유현주(민노·비례) 의원은 "민간단체가 '전남 장흥쌀 190t 대북 지원'을 추진한데 이어 강진 지역의 쌀 80t을 구입, 북한 수해 피해지역에 전달했는데 전남도 자체적인 지원 계획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예컨대 올해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은 84만5000t으로 전국 예상생산량(426만t)의 19.4%에 이르고 대북 지원 중단 및 쌀소비 감소로 인해 농민들의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데 '농도' 전남은 쌀값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쌀값 대책에 2009년산 쌀이 추가 격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및 대북 지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쌀 대북 지원은 정부 입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완·하남지구 전기·냉난방 동시 공급

시설공사' 준공식이 19일 오전 수완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첫 도입 일문일답 "기대 못미쳐 실망"

전문성 부족·재탕식 질의 의원들 준비부족 등 눈총

전남도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도정질문을 도입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준비한 원고와 '애드리브'를 적절히 섞어가며 생동감 있게 질의를 이끌어 답변자들을 긴장시키기는 커녕 전문성 부족 및 핵심 현안을 벗어난 지역구 민원성, 재탕식 질의 등으로 어설펐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제 255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 질문을 벌였다. 모두 7명의 의원이 나선 도정 질문에서 5명은 즉석 일문일답 방식으로, 나머지 2명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영덕(민주·무안 2)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답변자로 세워 놓고 '소방공무원 3교대'실시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었으나 장시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소방본부장에게 답변을 들어보시라"는 말을 들어야했다.

손태열(민주·영암 1) 의원은 대불산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영암군의 도비지원액을 높여달라거나 산단의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나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등의 민원성 질의를 해 눈총을 샀다.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22일 개막하지만 이를 포함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매서운 질의는 아예 없었다.

강성휘(민주·목포 1) 의원은 201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7억8300만원)의 이자 수익을 대북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투자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환경보전기금 등 전남도의 11개 기금을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하지만 재정형편과 중앙정부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차례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측 답변도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의 기존방침을 열거하는 판에 박힌 내용으로 일관해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도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거나 답변자를 긴장시키는 질의가 아니어서 기존 일괄답변 방식과 다른 점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불안한 동거' 속 역학구도 윤곽

집단지도체제 하의 민주당 지도부 간 견제와 협력 관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출신은 정동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 등 4명. 이들 중 박 최고위원을 제외한 3명은 손 대표의 견제세력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이다. 박 최고위원도 같은 모임을 하고 있으나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 같은 견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손 대표는 필요에 따라 구(舊)주류인 정세균 최고위원과의 전략적 제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자신이 지명한 김영춘 최고위원을 매개로 486그룹의 이인영 최고위원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 대표는 지난주 정세균 최고위원과 만찬회동을 갖고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영춘·이인영 최고위원과 심야 회동했다. 손 대표는 비정규직대책특위와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에 두 사람을 각각 내정한 상태다.

이 같은 구도 속에 지도부 간 힘겨루기는 정동영·박주선 최고위원의 해외국감 일정으로 늦춰졌던 후속 당직 인선이 초기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쇄신연대는 19일 만찬회동을 갖고 비주류 몫의 당직 배분을 요구키로 하는 등 세 과시를 본격화할 태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구청장 재선거 박빙 승부 예고

김선옥·서대석·김종식 후보 치열한 접전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19일 각 후보 측과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김선옥, 국민참여당 서대석, 무소속 김종식(기호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김선옥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종식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참여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서대석 후보와 김종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김선옥 후보의 지지도가 불안정했지만, 지난 주말 손학규 대표의 광주 방문 이후 지지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중과 주말을 거치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 10% 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김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대협(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이날부터 유세현장에 긴급투입해 지원유세를 벌이며 전대협 세대인 40대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참여당 관계자는 "최근 당 여론조사 결과 서대석 후보와 김종식 후보가 20% 중반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김선옥 후보는 20% 초반을 나타내고 있다"며 "서구에 거주하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근로자, 전교조 교사,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후보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경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종식 후보 측은 "민주당 등 정당에 대한 거부감과 정치인 출신보다는 행정경험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주민의 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김종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소속 박금자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관망해오던 전주언 전 서구청장의 조직과 지지자들 상당수가 선거 캠프에 합류하거나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청장 후보 모두 투표율이 이번 재보선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고 조직력을 풀 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부동층 확보와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28.7%)처럼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 투표율도 3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후보 고정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이끄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SSM법, 내달 통과 담보돼야 순차처리"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내달 내 처리가 담보돼야만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순차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골목상권보호법'으로 부르는 상생법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유통법이 먼저, 상생법이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상생법이 11월말까지는 처리된다는 (정부·여당의) 약속과 보장이 있어야 순차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금 와서 상생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시기까지 언급하며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상태로라면 10월25일 상생법도 유통법과 함께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